

# 대법원 2015도5255

##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권순일)은 육군 보병사단장인 피고인이 여군 하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,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

☞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5도5255 판결

### 1. 범죄사실의 요지

#### ■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제○○보병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임
- 피해자 김○○에 대하여
  - 피고인은 2014. 8. 21. 집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하사 김○○(여, 20세)의 어깨를 감싸 안아 껴안는 등 그 무렵부터 2014. 9. 30.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
- 피해자 박○○에 대하여
  - 피고인은 2014. 9. 25. 집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하사 박○○(여, 22세)의 어깨를 감싸 안아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,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

- 각 피해자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죄를 적용함

## 2. 소송의 경과

▣ 제1심(보통군사법원 2014. 12. 14. 선고 2014고11 판결)

- 피해자 김○○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: 유죄 - 징역 6월
- 피해자 김○○에 대한 성폭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의 점 : 이유 무죄(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이상 성폭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)
- 피해자 박○○에 대한 공소사실 : 전부 무죄

▣ 원심(고등군사법원 2015. 3. 31. 선고 2015노48 판결) : 파기, 징역 6월

-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파기(신상정보의 공개·고지명령을 누락한 잘못) :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하여 결론은 제1심과 동일
- 원심판결 중 피해자 박○○에 대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

## 3. 대법원의 판단

▣ 상고이유 : 피고인과 군검사 모두 채증법칙위반, 법리오해 등으로 상고함

▣ 판결선고 결과 :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

-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,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